‘지역과 함께 지속가능한 시민정부 실현’ 비전 아래 7대 전략에 상응한 20가지 장단기 추진과제 도출

계획 성격·범위·구성체계·여건·정책수요 등 고려해 현안의제·계획과제 진단

시민민주주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목적으로 먼저 계획의 철학적 토대로 고려되는 시민민주주의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시민민주주의의 실체적 내용은 적극적 시민과 공공선 실현을 정치적 이상으로 삼은 (시민)공화주의(civic republicanism) 정치사상으로 정립하였다. 여러 논의를 거쳐 시민민주주의가 지향할 정치적 이상이자 핵심가치로 ① **분권적 거버넌스**(devolved governance)/분권과 주민자치, ② **결사적 거버넌스**(associational governance)/결사(체)와 협치, ③ **숙의적 거버넌스**(deliberative governance)/공론장과 공적 숙의를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민선 7기에 처음으로 수립하는 이 계획의 여건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이 가지는 계획의 성격과 범위, 구성체계 등도 확립하였다. 기본계획의 성격과 범위는 시민민주주의에 내재하는 고유한 원리를 고려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시민민주주의 기본계획』은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에 기초한 4년 주기의 법정계획이다. 둘째, 10개년 정도의 계획 기간을 고려한 중장기 전략계획이다. 셋째, 시민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계획의 취지를 고려해 참여형 계획으로 접근한다. 넷째, 제도·주체·관계 등을 주요 계획내용으로 하는 절차적 계획의 성격도 고려한다. 시민민주주의 기본계획의 구성체계는 4~5개년 계획 기간을 가지는 중기 전략계획 성격이라는 전제조건하에 ① 계획의 기본개요, ② 계획의 여건 분석, ③ 계획과제 도출, ④ 계획의 기본구상, ⑤ 계획의 추진전략, ⑥ 계획의 실현화 방안 등 6개 장(章)에 기초한 계획의 구성체계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현실에 부합하는 시민민주주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계획의 여건과 문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시민민주주의 제도화에 필요한 정책 수요도 조사하였다. 계획 여건은 시민민주주의 개념에서 도출한 3가지 차원의 핵심가치를 고려하되, 제도적 여

건, 자원 여건 등 계획 요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제도적 여건에는 시민민주주의 관련 조례와 관련 계획, 각종 제도와 운영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였다. 자원 여건은 민주시정 구현에 필요한 물리적·재정적 자원을 조사·분석하되, 특히 협치·자치 관련 시설과 토지를 기초 조사하였다. 계획수요 조사는 행정, 시민사회, 일반시민 등 기본계획 관련 당사자집단을 대상으로 계획 여건과 계획 방향 및 전략 등에 관한 다양한 인식과 요구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조사·분석의 내용은 계획의 현안의제를 진단하고 계획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 실시한 전문가와의 공론화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1차 공론화에서는 시민민주주의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을 검토하고, 2차 공론화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협치 관련 주요 현안과 발전 방향을 살펴보았다. 3차 공론화에서는 시민의 참여·숙의와 서울형 공론장 관련 주요 현안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4차 공론화에서는 분권과 자치 관련 주요 현안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시민민주주의를 구성하는 3개 영역별 20개 현안 과제를 도출하였다.

현안과제 진단 등 토대로 계획수립 기본방향, 비전·목표, 추진전략 구체화

계획여건을 조사·분석하고, 계획의 현안 과제를 진단하여 계획수립의 5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①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시민민주주의 가치와 이상(ideals)에 기반을 둔 계획 기조와 내용을 구현한다. ② 시민민주주의를 선도·촉진하는 제도적 환경 중심의 계획을 수립한다. ③ 중장기 전략에 기초한 연동형 계획체제(rolling-plan)를 확립한다. ④ 시민민주주의 시정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영역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⑤ 계획의 일관된 이행을 위한 계획추진체계를 확립한다.

계획의 비전으로는 계획의 수요조사 결과와 부합하고 시민민주주의 가치와 이상을 바탕으로 계획 기조와 내용이 구현될 수 있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시민의 정부 실현'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을 중장기적으로 실현하려는 3가지 계획목표와 이 목표에 상응하는 7가지 추진전략이 도출되었다. 3대 계획목표에는 '지속가능한 협치시정을 향한 구조고도화', '시민의 참여와 숙의친화적인 시정체계의 확립', '지역분권과 협치에 기반을 둔 주민자치 실현' 등이 포함된다. 7대 추진전략은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과 활력 제고', '협치시정을 견인하는 기반 강화와 구조 혁신', '참여시정을 향한 행정혁신과 디지털민주주의 구현', '서울형 숙의시스템과 공론장 구

축', '더 넓고 깊은 재정민주주의 실현', '지역사회협치 2.0으로의 구조고도화', '마을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실현' 등으로 구성된다.

7대 전략에 맞춰 민선7기 시정 등 장단기 추진과제·세부 추진방안도 도출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과 활력 제고' 전략(추진전략 1)은 '제도적 기반조성과 공익활동 촉진', '시민사회 역량 강화와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구체적인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구체화하였다. '협치시정을 견인하는 기반 강화와 구조 혁신' 전략(추진전략 2)에서는 '협치친화적 시정전환을 선도하는 행정혁신', '행정 대 시민사회 간 서울협치협약 추진' 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참여시정을 향한 행정혁신과 디지털민주주의 구현' 전략 (추진전략 3)은 '시민참여 절차(제도)의 실효성 강화', '참여시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하여 이를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서울형 숙의시스템과 공론장 구축' 전략(추진전략 4)에서는 '시민민주주의를 선도하는 서울시민숙의시스템 구축', '서울형공론장 모델사업 추진' 등이 추진과제로 설정되었고 '더 넓고 깊은 재정민주주의 실현' 전략(추진전략 5)에서는 '시정예산의 참여와 협력 프로세스 질적 개선', '시민숙의예산제의 고도화와 지속가능성 확보'가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되었다. '지역사회 협치 2.0으로의 구조고도화' 전략(추진전략 6)은 '지역사회 기반 협치정책틀의 재정립', '자치분권예산제의 도입과 지속 확대' 등이 핵심 추진과제이다. 마지막으로 '마을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실현' 전략(추진전략 7)에서는 '지역사회분권기반 자치 관련 정책 거버넌스의 재정립', '동단위 주민자치 2.0 실현',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 등이 세부 추진과제로 설정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